

2010년도 상생협력·갈등관리 세미나 및 정기총회 자료집

2010. 12. 29.

2010년도 상생협력·갈등관리 세미나 및 평가총회 자료집

- 때 : 2010년 12월 29일(수), 10:00~14:30
- 곳 : 계룡스파텔 무궁화홀
- 주최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 주관 : 충남발전연구원
- 후원 : 충청남도

2010년도 상생협력·갈등관리 세미나 및 정기총회 개최계획(안)

2010. 12. 29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 목 적

- 충청남도 갈등·분쟁현안의 동향과 해결전망을 모색·제시하고, 효율적인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충청남도 중·장기 추진계획의 기초자료 확보
- 2010년도 포럼운영 실적 및 추진현황을 점검 및 결산하고 2011년도 포럼운영계획 관련 충남포럼·회원, 담당공무원 간 의견을 공유하여 협력방안을 모색
- 상생협력 갈등관리 세미나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 공유 활동을 통해 추후 포럼운영의 내실화를 모색

□ 개요

- 때 : 2010년 12월 29일(수), 10:00~14:30
- 곳 : 계룡스파텔 무궁화홀(1층)
- 참석대상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남부권포럼 임원·회원, 충청남도의회 의원, 연구기관 및 대학교수, 충청남도 및 각 시·군 갈등업무 관계관 등 80명 내외
- 주최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 주관 : 충남발전연구원
- 후원 : 충청남도

□ 행사일정(안)

사회 : 박재필(충남포럼 자문위원)

시 간	소요 (분)	내 용	비 고
10:00~ 10:30	20	<input type="checkbox"/> 개 회 사	이주영 상임공동대표(충남포럼)
		<input type="checkbox"/> 축 사	박진도 원장(충남발전연구원)
		<input type="checkbox"/> 환 영 사	박윤근 국장(충청남도 자치행정국)
제1부 : 충청남도 갈등현안 동향과 해결방향 세미나			
10:20~ 11:20	60	<input type="checkbox"/> 충남지역 갈등현안과 해법찾기(Ⅰ)	최한규 박사(선문대 정부간관계 연구소 연구위원), 전오진 박사 (호서대 사회문제연구소 연구위원)
		<input type="checkbox"/> 충남지역 갈등현안과 해법찾기(Ⅱ)	신기원(신성대 교수)
		<input type="checkbox"/> 충남지역 갈등현안과 해법찾기(Ⅲ)	이준건 박사(한국공공행정연구원 갈등조정연구소장)
11:20~ 12:00	40	<input type="checkbox"/> 종합토론 - 토론자 : 김민영 기자(중도일보) - 토론자 : 이운환 교수(건양대학교) - 토론자 : 정형식 대표(남부권포럼)	좌장 : 최창희 교수(충남포럼 지역원로위원장)
12:00~ 13:00		<input type="checkbox"/> 오찬	
제2부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정기 총회			
진행 : 이준건(충남포럼 갈등조정위원장)			
13:00~ 13:10	10	<input type="checkbox"/> 개회선언	
13:10~ 13:20	10	<input type="checkbox"/> 감사패 및 감사장 전달	감사패 : 김종문 의원 감사장 : 4대권역별 운영위원장, 갈등조정위원장, 도 관계관
13:20~ 13:40	20	<input type="checkbox"/> 임원 선출 및 상임공동대표 이임·취임 인사	감사패 : 이주영 상임공동대표
13:40~ 14:00	20	<input type="checkbox"/> 2010년 충남포럼 경과보고 및 2011년 충남포럼 주요계획(안)	최병학 충남포럼운영위원장
14:00~ 14:20	20	<input type="checkbox"/> 안건 회의	
14:20~ 14:30	10	<input type="checkbox"/> 정리 및 폐회	

[목 차]

[제1부] 충청남도 갈등현안 동향과 해결방향 세미나

- 충남지역 갈등현안과 해법찾기(Ⅰ) / 5
- 충남지역 갈등현안과 해법찾기(Ⅱ) / 27
- 충남지역 갈등현안과 해법찾기(Ⅲ) / 43

[제2부]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정기총회

- 감사패 및 감사장 전달 / 59
- 안건1 : 2010년도 충남포럼 경과보고 / 63
- 안건2 : 2011년도 충남포럼 주요사업계획(안) / 75
- 안건3 : 충남포럼 임원변경 및 조직개편(안) / 81

[부 록]

- 충청남도 갈등·분쟁 관리목록 / 89
-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 91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운영 주관기관 지정서 / 96

[제1부]

충청남도 갈등현안 동향과 해결방향 세미나

◆ 목 차 ◆

- 충남지역 갈등현안과 해법찾기(Ⅰ)
- 충남지역 갈등현안과 해법찾기(Ⅱ)
- 충남지역 갈등현안과 해법찾기(Ⅲ)

1. 충남지역 갈등현안과 해법찾기(1)

2010. 12. 29.

충남지역 갈등현안과 해법찾기(Ⅰ)

- 갈등현장 지원체계 구축사업 관련 갈등현안 현장조사 -

최한규 박사(선문대 정부간관계연구소 연구위원)
전오진 박사(호서대 사회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목 차

1. KTX 천안아산역 택시사업 구역
2. 금강하구둑 기수역복원 관련
3. 호남고속철 공주역사 설치관련
4. 예산 신소재산업단지 조성관련
5. LH공사 택지개발사업 축소 관련
6. 천안직산읍 국도1호선교차로 설치
7. 청양 신대저수지 축조관련
8. 천안풍세분기 송전선로 설치
9. 서산국방과학연구소 증설관련

1.1 KTX 천안.아산역 택시사업 구역

■ 개요

- KTX역명칭갈등후(아산시행정구역) 2003년 천안택시업계 공동영업 요구
- 아산택시업계 : 천안아산 전체 통합, 천안 - 부분통합 주장
- 충남도의 조정노력에도 갈등 지속, 2010년 11월 건교부의 직권 조정 절차 중
- ➡ 정부간갈등(기초간 갈등), 관할구역조정 갈등, 갈등 해방기

■ 진행경과

- 2003.12. 2 천안택시업계 공동영업/택시승강장설치요구(충남도)
- 2004.4. 2 천안과 아산택시업계 물리적 충돌(KTX천안아산역)
- 2004. 4. 6 조정회의(충남도)
- 2009. 7. 20 충남-천안-아산 실무자 간담회(아산시관할구역)
- 2010. 11. 1 국토부-천안-아산 관계자 간담회(공동사업구역/현행유지)

3

1.2 KTX 천안.아산역 택시사업 구역

■ 성격(특성) · 쟁점 · 이해관계자 분석

- (성격) 정부간 갈등(기초-기초), 관할구역 갈등
- (쟁점) KTX 행정구역VS일부포함, 이용객편의, 부분통합/전체통합,
- (이해당사자) 아산시(택시업계)-천안시(택시업계)-충남도-국토부
- ➡ 도시자 조정권/ 국토부장관 조정권 => 제3자에 의한 관할 갈등 타결임박

■ 갈등 해법찾기 기본방향 설정

- 양측 주장에 대한 충분한 의견제시 청취, 객관적 자료분석 -> 대화와 토론
- 충남도의 조정안 발전된 형태로 조정될가능성 높음(부분통합->전체통합)
- 일방의 손실이 최소화되는 지점에서 협의
- ➡ 대화와 토론 -> 조정안에 대한 순응

4

1. 3. KTX 천안.아산역 택시사업 구역

■ 해결 방안

- 통합추진위원회, 조정위원회 협력능력 미숙
 - 양방이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조정안 제시
 - 조정이후에 상생협력방안 마련
- ➡ (조정안) KTX역통합, 천안일부지역 아산영업가능, 중기적으로 전체통합

■ 비교 : 정책건의, 행정사항 등

- 아산과 천안의 상생협력 방안 마련 - 공동사업 구상
- 양지방정부의 사업자 실득과 이해

5

1. 4. KTX 천안.아산역 택시사업 구역

■ 관련 사진



6

2. 1. 금강하구둑 기수역 복원 관련 갈등

■ 개요

- 1990년 금강하구둑 설치 - 농공업용수 확보, 홍수예방 1841m
- 2009년 서천군 '금강살리기종합계획' -기수역 복원 공식화(200m 절거)
- 군산시 농공업용수 확보곤란, 홍수때 바닷물유입, 저지대 범람 등 반대
- ➡ 정부간 갈등, 지역개발 관련 갈등, 4대강 사업 미포함(갈등 잠재)

■ 진행경과

- 2009. 1.30 충남발전연구원 금강하구 기수역 복원 방안 제시
- 2009. 2. 4. 서천군 금강하구 기수역 복원 공식화
- 2009. 3. 13 군산시 반대 입장 기자회견
- 2009. 3. 25 금강하구호 관련 간담회(국토부-서천군-군산시-충남-전북)
- 2009. 6. 8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국토부) 금강하구둑 수질개선 미포함
- 2010. 10. 2 금강하구둑 개선사업 채택(충남도) -> 2010.11.16용역(국토부)

7

2. 2. 금강하구둑 기수역 복원 관련 갈등

■ 성격(특성) · 쟁점 · 이해관계자 분석

- (성격) 정부간 갈등(기초-기초/광역-광역), 지역개발갈등, 환경분쟁
- (쟁점) 농공업용수/담수사용불가, 수질개선/효용의문, 홍수예방-의문,환경개선
- (이해관계자) 서천군-군산시-충남도-전북도-국토부-농림부
- ➡ 갈등쟁점 : 해수유통의 효과

■ 갈등 해법찾기 기본방향 설정

- 해수유통(기수역복원) 효과성에 대한 쟁점 -> 전문가 영역
- 양 지방정부간의 협의체를 통한 문제해결
- 해수유통시 대안 탐색 작업
- ➡ 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해결 및 전문가 포함의 협의체 구성

8

2. 3. 금강하구둑 기수역 복원 관련 갈등

■ 해결 방안

- 갈등이해당자의 협의기구 : 전문가 그룹 참여
- 기수역복원 효과에 대한 분석
- 농공업용수 확보 대안 탐색
- ➡ 기관간 협의체 구성으로 합리적 대안 제시 가능(전문가영역)

■ 비교 : 정책건의, 행정사항 등

- 이해당자의 협의기구 구성
- 전문가를 통한 내안 탐색.

9

2. 4. 금강하구둑 기수역 복원 관련 갈등

■ 관련 사진



10

3. 1. 호남고속철 공주역사 설치 관련 갈등

■ 개요

- 공주시 이인면 신영리 일원 공주역 설치 2009년 착공, 2014년 완공목표
- 전체 1,520m 중 220m 제외 토공구조물 건설 - 주민들이 반발
- 18m 의 토공구조물로 마을 단절및 조망권 차단 -> 교량형 건설 주장
- ➡ 주민-시공시간 갈등, 지역개발관련 갈등, 갈등 증폭기(일부협의)

■ 진행경과

- 2006. 4. 28 남공주역 신설(soc 건설 추진 위원회)
- 2007. 6. 17 공주시 이인면 신영2리 일원 설치 확정
- 2009. 7. 8 주민설명회 : 지역주민 교량화 요구
- 2010. 9. 25 간담회(충남지사-철도시설공단-주민) 교량400, 도로확장
- 2010. 9. 30 지역주민 300여명 시위

11

3. 2. 호남고속철 공주역사 설치 관련 갈등

■ 성격(특성) · 쟁점 · 이해관계자 분석

- (성격) 주민-정부간 갈등, 지역개발 관련 갈등
- (쟁점) 성토공사V교량화, 소하천이설VS 휴식공간, 도로확장, 역세권 개발
- (이해관계자) 지역주민-시설공단-건교부(기재부)-공주시-충남도
- ➡ 협의체 구성 후 협의중이며 교량화 부분만 미합의

■ 갈등 해법찾기 기본방향 설정

- 행정절차의 투명성 확보로 주민 신뢰 회복
- 민관협력 협의체 구성을 통한 협의
- 대화 와 설득 필요
- ➡ 협의체 구성하여 대화와 설득 지속하고 투명한 절차로 주민 신뢰회복

12

3. 3. 호남고속철 공주역사 설치 관련 갈등

■ 해결 방안

- 철도노반 교량화 요구가 1차 쟁점이며 휴식공간확보, 진입로확장 부수쟁점
- 지역이해관계자 포함하는 협의체구성 및 운영내실화
- 지역주민의 이해와 설득 및 간접적인 유인책 마련
- ➡ 대화와 토론으로 주민 이해와 설득

13

3. 4. 호남고속철 공주역사 설치 관련 갈등

■ 관련 사진



14

4.1. 예산신소재산업단지 조성 관련 갈등

■ 개요

- 충남도-예산군 경인주물공단 조합 MOU체결 23개기업 상봉리일원 공단설립
- 민간개발 방식 481천m² 667억, 2013년 완공
- 지역주민 - 주물공장으로 분진, 악취로 낙농업피해, 주민건강 위해 공단
- ➡ 산업단지의 인식차이:주민과 정부간 갈등, 지역개발관련 갈등 해당,갈등중폭기

■ 진행경과

- 2009. 11. 23. 경인주물공단조합 + 충남도 +예산군 MOU 체결
- 2010. 7. 28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 2010. 8. 12. 주민설명회 무산(예산 고덕주민, 당진군 면천주민 반대)
- 2010. 9. 1 반대대책위 충남도 항의방문, 9. 30. 예산군청앞 시위
- 2010. 11. 3. 당진군 의회 조성 반대 결의문 채택.

15

4.2. 예산신소재산업단지 조성 관련 갈등

■ 성격(특성) · 쟁점 · 이해관계자 분석

- (성격) 주민과 정부간 갈등, 지역개발관련 갈등, 환경관련갈등
- (쟁점) 신소재VS주물, 친환경시설설치VS환경오염, 경제활성VS 피해유발
- (이해관계자) 지역주민(찬반)-예산군-산업단지(주)-당진군(회)-충남도
- ➡ 기피시설입주와 관련한 갈등, 주민과 기관간 갈등, 지역개발관련 갈등,인지

■ 갈등 해법찾기 기본방향 설정

- 기피시설입지와 관련 갈등으로 주민의 이해와 설득 필요
- 주민의 행정기관, 상호 불신 만연 -> 주민 공동체 붕괴 회복
- 주민과 협의체구성 - 주민참여방안 마련(공해감시단운영, 협약채결)
- ➡ 주민과 협의체구성, 상호협약채결 -> 불신 완화

16

4.3. 예산신소재산업단지 조성 관련 갈등

■ 해결 방안

- 이해당사자간 협의체구성, 대화통로 개설
- 이해당사자간 협약체결 : 환경감시 모니터링단 구성
- 주민생활지원방안 및 주역공동체 회복 방안 마련
- ➡ 협의체 구성으로 상호불신을 완화 하고 협력 체결로 해결 노력

■ 비교 : 정책건의, 행정사항 등

- **혈액 체결 및 이행:** 공해모니터링단, 혈액 체결

17

4.4. 예산신소재산업단지 조성 관련 갈등

■ 관련 사진



18

5.1 NH공사 택지개발사업 축소 관련 갈등

■ 개요

- 아산신도시 2단계 533.7만평 중 1차 에 대한 보상은 현재 진행중 이며,
 - 2차 탕정지구 377.3만평 에 대해 NH공사와 국토부가 전면 재검토
 - 지역주민들이 16년간 사업 장기화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원안추진 요구
- ➡ 주민과 기관간 갈등, 지역개발 관련 갈등, 갈등 증폭

■ 진행경과

- 2005. 12.29 탕정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건교부)
- 2009. 12. 1 아산신도시 2단계 1, 2차 지구 분리, 1차지구 실시계획승인
- 2010. 9. 10 아산탕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전면재검토(건교부)
- 2010. 9. 15 신도시대책위 현수막 게시 및 손해배상 소송 전개 등 결의
- 2010. 10. 11 아산시 건교부 건의 (약 146만평 개발 지속 등)

19

5.2 NH공사 택지개발사업 축소 관련 갈등

■ 성격(특성) · 쟁점 · 이해관계자 분석

- (성격) 주민-기관간 갈등, 지역개발 관련 갈등, 갈등 증폭기
 - (쟁점) 원안추진 VS 사업취소, 지구해제 VS 사업연기, 피해보상
 - (이해당사자) 주민-NH - 국토부- 아산시- 충남도
- ➡ 주민과 기관간 갈등, 주민 재산권 침해, 충남발전계획수정 등 후속피급효과

■ 갈등 해법찾기 기본방향 설정

- 주민의 대 행정기관 불신 만연 -> 민·민 갈등으로 지역공동체 붕괴 우려
 - 적절한 대안 사업 추진 및 주민 안정화 노력
 - 오랜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협의체구성 -> 간접적 보상 노력
- ➡ 적절한 대안 사업 구성으로 주민 안정화 와 피해 보상

20

5.3. NH공사 택지개발사업 축소 관련 갈등

해결 방안

- 아산시의 의견 반영 되도록 노력
- 주민 피해 보상 대책(간접보상)을 위한 협의체 구성
- 관련 사업 지속 추진 노력(아산시, 충남도의 사업 참여)
- ➡ 주민 피해 최소화 노력과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

비고 : 정책건의, 행정사항 등

- 민관 협력으로 협의체 구성 : 피해 보상 및 후속 사업 지속 협의
- 후속 사업에 영향 주지 않도록 도로 등 기반 시설 설치 노력

21

5.4. NH공사 택지개발사업 축소 관련 갈등

관련 사진



22

6.1 천안 직산읍 국도1호선 교차로 설치 갈등

■ 개요

- 2005년 충남TP조성, 업체 100여개 입주, 직산사거리 상습정체, 불법유턴
- 상습정체로 교통 받던 마을 주민과 충남 TP 직원들이 교차로 설치 탄원
- 대전국토관리청은 예산문제와 신호등 설치 이격 550m 이내 라며 난색
- ➡ 주민과 기관간 갈등, 시설설치 관련 갈등, 갈등 해빙단계

■ 진행경과

- 2006. 4. 19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조건부 가결)
- 2010. 8. 11 직산읍이장협의회 충남TP 진입로 교차로 설치 탄원서제출(국판)
- 2010. 8. 17 대전국토관리청 -> 예산관리사무소 이첩 -> 불가 입장전달
- 2010. 9. 30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조건부가결)

23

6.2 천안 직산읍 국도1호선 교차로 설치 갈등

■ 성격(특성) · 쟁점 · 이해관계자 분석

- [성격] 주민과 기관간 갈등, 시설물 설치 갈등, 갈등 해빙기
- (쟁점) 주민 교차 설치 와 법적으로 설치 불가 입장
-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 국토관리청+천안시+경찰서
- ➡ 이해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 가능한 사안.

■ 갈등 해법찾기 기본방향 설정

- 쟁점에 대한 이해당사자간 인식 공유로 갈등해결 가능
- 예산문제와 법적 검토에 의해서 해결할 사안.
- ➡ 당사자간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 가능

24

6.3. 천안 직산읍 국도1호선 교차로 설치 갈등

■ 해결 방안

● 성환순환도로 건설로 진입로 혼잡 해결 가능(갈등 해결)

➡ 기관과 주민간의 대화와 설득

■ 비교 : 정책건의, 행정사항 등

● 기관 협의로 예산 확보

25

6.4. 천안 직산읍 국도1호선 교차로 설치 갈등

■ 관련 사진



26

7.1 청양 신대저수지 축조 관련 갈등

■ 개요

- 한국농어촌공사가 4대가 사업 일환으로 신대저수지 독농이기사업 시행
- 기존 독 보다 3.5m 높이고 102억 투입 2015년까지 완공 목표
- 주민들은 가뭄이나 홍수피해없고, 연소재지로 독붕괴위험 등 피해 호소
- ➡ 주민과 기관의 갈등으로 지역개발 관련 갈등, 대화와 설득

■ 진행경과

- 2010. 1. 15. 한국농어촌공사 신대저수지 독농이기 사업 예정지 제출
- 2010. 6. 29. 환경성 검토 협의회 의결 수렴
- 2010. 7. 8. 사전환경성 검토조서 제출 및 주민공람 시작
- 2010. 7. 26 주민설명회 - 주민 축조반대, 준설 및 퇴적토 제거 사용 요구
- 2010. 11. 독농이기 사업 토목공사 입찰, 보상 협의

27

7.2 청양 신대저수지 축조 관련 갈등

■ 성격(특성) · 쟁점 · 이해관계자 분석

- [성격] 주민과 기관간 갈등, 지역개발관련 갈등, 수자원개발, 갈등 해빙기
- (쟁점) 농업용수확보 VS 홍분, 생태환경개선, 주민불안, 주민피해보상
- [이해관계자] 지역주민-농어촌공사-청양군
- ➡ 주민과 충분한 대화와 설득 후 공사 시작, 주민 설득 미흡

■ 갈등 해법찾기 기본방향 설정

- 독 아래 주민(연소재지) 과 독 위 주민간 온도차이 => 계획단계 주민참여:
- 주민설득 작업 후 사업 시행
- 주민의 불안감 해소 와 주민생활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 등 협의
- ➡ 당사자간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 가능

28

7.3. 청양 신대저수지 축조 관련 갈등

■ 해결 방안

- 계획단계에서 주민참여 : 이해와 설득
 - 주민생활지원과 대화와 협의의 장 마련
- ➡ 기관과 주민간의 대화와 설득

■ 비교 : 정책건의, 행정사항 등

29

7.4. 청양 신대저수지 축조 관련 갈등

■ 관련 사진



30

8.1. 천안 풍세분기 송전선로 설치 관련 갈등

■ 개요

- 천안시 풍세면 풍세산업단지 조성 2011년까지 완공 계획
- 한전이 산업단지에 전력공급하기 위해 3.63km 154kv 풍세분기 송전설치
- 송전선로 지나는 지역주민과 한전간 경과지 와 설치 방법 놓고 갈등 대립
- ➡ 주민과 기관간 갈등, 기피시설 설치와 관련한 갈등, 갈등중복기

■ 진행경과

- 2008. 6. 17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한전→지경부)
- 2008. 9. 29 주민설명회 개최. 풍세면 주민 경과지 변경, 전구간 지중화요구
- 2009. 9. 10 실무회의(천안시+한전) 과다 사업비부담, 타기관협의 통 거절
- 2009. 10. 8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요구 미반영 불만 주민 퇴장 무산.
- 2010. 9. 13.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지경부) - 보상협의 중

31

8.2. 천안 풍세분기 송전선로 설치 관련 갈등

■ 성격(특성) · 쟁점 · 이해관계자 분석

- (성격) 비선호시설설치와 관련 갈등, 주민과 기관간 갈등, 주민간 이해갈등
- (쟁점) 선로변경VS 최적지, 지중화 VS 경제성, 재산가치하락 VS 마을지원사업
- [이해관계자] 주민-한전-천안시-지경부
- ➡ 기피시설 설치와 관련한 갈등으로 주민의 이해와 설득(공익사업) 협의체구성

■ 갈등 해법찾기 기본방향 설정

- 기피시설설치 와 관련한 갈등으로 협의체구성 해결
- 재산가치 하락 등 마을지원사업 등 간접적인 보상 협의 추진
- ➡ 당사자간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 가능

32

8.3. 천안 풍세분기 송전선로 설치 관련 갈등

■ 해결 방안

- 주민과 이해 기관 간 협의체 구성: 이해와 설득, 모두 논의
 - 재산가치 하락 등 친환경 송전철탑 시공 권장 및 마을 숙원사업 지원 등 협의
- ➡ 기관과 주민간의 대화와 타협 방안 마련

33

8.4. 천안 풍세분기 송전선로 설치 관련 갈등

■ 관련 사진



34

9.1 서산 국방과학연구소 중설 관련 갈등

■ 개요

- 국방과학 연구소 2013년까지 기지1리 17만m² 연구소 중설 계획
- 기지1리 42가구 중 약 30여가구만 수용하고 나머지 12가구 미수용
- 비수용 주민들 나머지 가구수용해줄 것 요구하며 갈등 발생
- ➡ 주민과 중앙정부간 갈등(기관간), 지역개발관련 갈등, 이해갈등, 갈등증폭기

■ 진행경과

- 2010. 4. 7. 국방과학연구소 제5시험장 중설 관련 용역 발주
- 2010. 6 기지리 토지 측량 시작 (주민 인지)
- 2010. 7. 10 지역주민 토지측량 거부, 서산시청 과 국방과학연구소 항의방문
- 2010. 8. 29 주민들 마을 전체수용 진정서 제출
- 2010. 10. 2 마을 전체 수용 현수막 게시, 국방과학연구소 수용불가 입장

35

9.2 서산 국방과학연구소 중설 관련 갈등

■ 성격(특성) · 쟁점 · 이해관계자 분석

- (성격) 주민과 중앙정부간(기관간) 갈등, 지역개발과 관련 갈등, 갈등잠재기
- (쟁점) 주민피해감수 여부, 전체수용VS부분수용, 보상의필요성
- (이해관계자) 비수용주민-국방과학연구소(국방부)-서산시
- ➡ 주민의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 항배, 주민이해와 설득 및 보상 협의.

■ 갈등 해법찾기 기본방향 설정

- 대화와 타협을 위한 협의체 구성 : 지방정부의 역할 중요, 갈등조정기구
- 지방정부의 중재노력 절실히 요구됨.
- ➡ 지방정부의 갈등해결 중재 노력 요구(대화와 타협)

36

9.3. 서산 국방과학연구소 중설 관련 갈등

■ 해결 방안

- 지방정부(기초)의 갈등중재노력 : 협의체 구성 및 대화장구 개설
- 주민 피해 보상 (간접) 및 주민지원사업 등 논의

➡ 지방정부의 갈등 중재 노력 (대화와 설득)

■ 비교 : 정책건의, 행정사항 등

- 기관 협의로 예산 확보

37

9.4. 서산 국방과학연구소 중설 관련 갈등

■ 관련 사진



38

갈등사례 갈등 수준



II. 충남지역 갈등현안과 해법찾기(II)

2010. 12. 29.

충남지역 갈등현안과 해법찾기(Ⅱ)

- 갈등현장 지원체계 구축사업 관련 갈등현안 현장조사 -

신기원 교수(신성대학)

목 차

1. 해상경계 및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갈등
2. 당진-아산 산업기지 항만준설 관련 갈등
3. 동부건설의 동부화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따른 갈등
4. 태안 광업권 출원관련 갈등
5.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관련 갈등

1. 해상경계 및 공유수면매립지 관할 갈등



3

■ 개요

- 2004년 9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판결에 의해 해상도계를 인정하고 당진군 공유수면에 위치한 제방의 당진군 자치권 인정
-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공유수면매립토지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귀속자치단체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에 의거 신규매립지에 대해 평택시에서 분쟁조정신청

■ 진행경과

- 2009년 7월 신규매립지 당진군토지로 신규 등록
- 2010년 2월 해당토지 등록은 무효로 행안부장관이 귀속단체결정해야 한다며 귀속자치단체 결정 신청
- 2010년 5월과 6월 추가 신규매립지 당진군토지로 신규 등록

4

■ 성격(특성) · 쟁점 · 이해관계자 분석

- 공유수면매립을 둘러싼 자치단체간 행정관할구역 분쟁으로 현재 진행중임
- 해상도계 및 관할구역에 대한 법규 미비
- 자치단체간 상호 협상과 의견 공유를 통한 해결방식이 아닌 제3자를 통한 해결방식으로 분쟁지속 기간 장기화

■ 갈등 해법찾기 기본방향 설정

- 평택당진항의 개발 목적 검토
- 호혜평등에 입각한 상호동반자적 협력체계구축 필요
 -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식
 - 민간차원의 문화교류

5

■ 해결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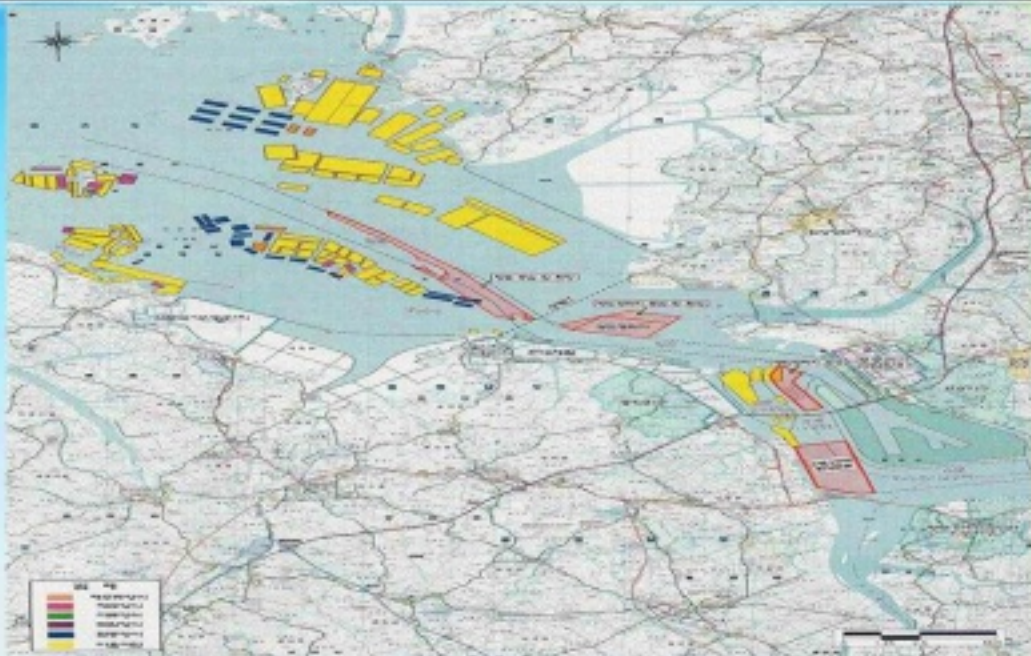
- 행정안전부 분쟁조정위원회의 올바른 결정 및 수용
- 여론 및 정치인 등을 통한 우리측 주장 타당성 행정안전부에 전달

■ 비교 : 정책건의, 행정사항 등

- 충남도에 항만관련 기관 신설
- 해양(항만)관련 공무원 보충 및 전문성 제고
-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매립지 분쟁 해소

6

2. 당진-아산 산업기지 항만준설 관련 갈등



7

■ 개요

- 아산산업기지 항만개발사업의 수정된 부분을 협의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서 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주민들과 갈등 발생
-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나와서 설명회를 하다 보니 의혹 증폭

■ 진행경과

- 2010년 7월 평택지방해양항만청에서 당진군으로 환경영향평가(재협의)(초안) 송부
- 2010년 8월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 반발
- 2010년 11월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계획서 환경부에 제출

8

■ 성격(특성) · 쟁점 · 이해관계자 분석

- 사업허가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해당지역 주민간의 갈등
- 당진군은 권한이 없고 협의의견만 제출하여 갈등해결에 한계
- 현재의 변화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 표출

■ 갈등 해법찾기 기본방향 설정

- 현실타당성있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주민들의 오해 불식
- 주민들의 불만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및 실효과정 필요
- 1회성 민원으로 파악하지 말고 관계기관에 의견 전달 및 반영 등으로 잠재된 불만을 해소하려는 노력 필요

9

■ 해결 방안

-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환경부의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 비교 : 정책건의, 행정사항 등

- 해당지역도 인접한 평택시와 동반 발전할 수 있는 개발계획 필요
-연육교의 조속한 착공
- 삼교천 퇴적층이 여름철 수문개방 시 서해대교주변에 쌓여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

10

3. 동부건설의 동부한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따른 갈등



11



12



13

■ 개요

- 동부건설이 동부제철 종실에 따른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서 동부화력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 당진군과 동부건설 및 지역주민들간 갈등이 복합된 양상
- 발전소건설계획이 확정될 경우 다양한 상황 전개 예견

■ 진행경과

- 2009년 12월 동부건설 화력발전소 건설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수면매립 사전환경성 검토 신청서 제출
- 2010년 8월 당진군 및 당진군의회 건설 반대
- 2010년 12월 지식경제부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

14

■ 성격(특성) · 쟁점 · 이해관계자 분석

- 대기오염배출시설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환경시설 관련 갈등
- 당진군과 민간기업의 갈등 및 주민간 갈등 이 복합적으로 연계
- 결정권 없는 자치단체가 군정책방향과 관련 반대의견 표시
- 반대를 통해서 얻는 이익 존재

■ 갈등 해법찾기 기본방향 설정

- 당진군과 동부건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 모색
- 추후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 모색
- 왜목마을이 관광지로서 갖는 가치 보존

15

■ 해결 방안

- 허가와 불허 두 가지 시나리오로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계획 마련
-점점을 찾으려는 노력 필요

■ 비교 : 정책건의, 행정사항 등

- 투명하고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 화력발전소 주변 피해 사례를 분석하여 환경기준 새로 정함
- 자치단체에게 공모하여 전력사업을 신청하는 방안 모색
- 정치지도자들의 포퓰리즘 경계

16

4. 태안 광업권 출원관련 갈등



17



18

■ 개요

- 외지에 거주하는 업자가 광업권을 출원하여 현지주민들이 반발하여 생긴 갈등으로 현재 진행중임
- 일부 지역의 경우 20년전 광업권출원으로 소송에 시달리는 등 피해의식 강함
- 광업권 설정이 갖는 문제점 여러 지역에서 제기

■ 진행경과

- 2010년 7월 태안군으로 광업권설정 출원 공익협의 통보
- 2010년 7-8월 지역주민, 태안군의회 반대의견 지식경제부에 전달
- 2010년 12월 현재 출원된 4개 지적 중 1개는 불허, 3건은 실시조사 대기 중으로 내년 초 실시 예정

19

■ 성격(특성) · 쟁점 · 이해관계자 분석

- 광업권출원인과 해당지역간 갈등으로 민민간 갈등
- 현재 진행중인 갈등으로 광업권설정의 불합리한 측면에서 야기
- 내년 초 실시조사를 통해서 허가로 결정될 경우 제2의 안면도사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농후

■ 갈등 해법찾기 기본방향 설정

- 불허로 결정되기 위한 방안 마련
-광업등록사무소 재방문 및 실시조사 시 의견 개진
- 광업법 재개정

20

■ 해결 방안

- 광업등록사무소의 불허 결정

■ 비교 : 정책건의, 행정사항 등

- 광업법의 내용 검토 및 불합리한 내용 개정
- 광업권을 둘러싼 행정적 피해 및 부조리사례 수집 및 개선

21

5.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관련 갈등



22



23

■ 개요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서부발전의 이해가 맞아 조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제반 이행절차가 진행되면서 발생한 갈등
- 건설을 반대하는 서산시와 서부발전간 갈등, 서부발전과 반대주민간 갈등, 찬성주민과 반대주민의 갈등이 복합된 사안으로 현재 진행중임

■ 진행경과

- 2007년 9월 가로림조력발전(주)설립
- 2007년 12월 해양수산부 가로림만 가치평가: 개발 보다 보존
- 2008년-현재 찬성과 반대 의사 표명
- 2010년 10월-현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24

■ 성격(특성) · 쟁점 · 이해관계자 분석

- 정부의 이율배반성이 내포된 갈등
- 환경보존과 자원개발이란 양상의 갈등-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공익의 갈등
-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으려는 비민주적 행태
- 자치단체의 권한 미약

■ 갈등 해법찾기 기본방향 설정

- 국가의 지원을 받아 충남도 차원에서 해결하는 방안 모색
-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최대한 현실 반영

25

■ 해결 방안

- 충남도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가로림만에 교량 건설
- 주민들의 반대이유에 대한 충분한 실효과정 필요
- 객관적이고 공정한 내용의 환경영향평가

■ 비교 : 정책건의, 행정사항 등

- 정부정책의 일관성 유지
-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대한 개념 재정립
- 다양한 방식의 신재생에너지정책 추진
- 자치단체의 역할 재정립

26

Ⅲ. 충남 지역갈등과 해법찾기(Ⅲ)

2010. 12. 29.

충남지역 갈등현안과 해법찾기(Ⅲ)

- 갈등현장 지원체계 구축사업 관련 갈등현안 현장조사 -

이준건 박사(한국공공행정연구원 갈등조정연구소장)

목 차

1. 무궁화 자연생태공원 묘원 공사
2. 금산 우리농 장산개발사업
3. 헤리티지 마운트 컨트리클럽(전, 논산 나이스
골프장
4. 상생 청소년 수련시설 조성사업

1. 무궁화 자연생태공원 묘원 공사

■ 개 요

- 무궁화공원랜드가 충청남도에 장묘공원 사업 인·허가로 지역주민 갈등 발생
- 지역주민 장묘사업 저지를 위한 집단행동 등 강하게 반발
- 논산시 중재 조정노력 불구 지역주민 사업자와의 대화가 원천적으로 단절
- 지역주민 내년 4~5월 개최 예정인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기대

3

1. 무궁화 자연생태공원 묘원 공사

■ 진행경과

- 08.12. 3 재단법인 무궁화공원랜드 설립허가 (충청남도)
- 09. 2. 2 반대추진위 벌곡환경보호회 공원묘지설치허가 및 법인허가 원인 무효 소송의 건 진정서 제출
- 09. 5.14 광산김씨 문경공파 주최 논산시청 앞 집회실시
- 10. 5.19 원불교 공동묘지 설치반대 집회 (양산리, 한삼천리 주민 200명)
- 10. 7.26 원불교 공동묘지 설치반대 집회 (벌곡면 주민 300명)
- 10. 8. 3 반대추진위 논산 시의회 방문 (반대서명서 전달)
논산시의회 공동묘지 진행과정 및 현황 의견청취
- 10. 8.12 충청남도지사 면담
- 10.11.25 논산시장 면담
- 10.12월 논산시 주민대상 사업설명회 계획을 추진 중 그러나 주민측 주민 설명회 개최를 원천적 봉쇄

4

1. 무궁화 자연생태공원 묘원 공사

■ 성격(특성) · 쟁점 · 이해관계자 분석

- 갈등정도 : 갈등 종족기 (분출기)
- 갈등성격 : 지역주민과 사업자간 갈등
- 무궁화공원묘원 사업추진 내용에 대한 오해
- 사업자와 지역주민 상호 간 불신으로 대화 단절
- 벌곡발전협의회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 시도 실패
- 전농연 논산지부 개입으로 이해 당사자→3자간으로 확대
- 인근 석산개발(골재채취장)로 10여년 넘게 고통 경험(연산방향 4km)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입지로 분진 도로파손 등 불이익 경험
- 사업규모 견해차 : 실제 295,070m² (8만9천여평)
주민 2,750,000m² (83만평 규모 주장)
- 주민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11. 5월)에 대한 부결 기대

5

1. 무궁화 자연생태공원 묘원 공사

■ 갈등 해법찾기 기본방향 설정

- 비선호 시설 입지에 관한 학습 및 이해와 설득 필요
- 사업내용 및 차후 사업 확장(화장장, 매장묘지 등) 계획에 대한 담보
-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민주적 파트너십
- 전문성 및 투명성, 객관성이 확보된 제3자의 중재 조정 노력(충남상생갈등포럼)
 - 각종 세미나 및 대화의 장 마련
 - 선진지 견학 및 사례 학습으로 상호간 이해 확장
- 전농연 논산지부 등의 개입 최소화, 당사자간 자율적 협의 창구 확보
(수시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회 구성)
-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따른 대안 모색
- 지역발전기금(10억원)규모 및 공중,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의견 접근
 - 기금 사용처에 대한 명시, 활용방안 설정 검토 등

6

1. 무궁화 자연생태공원 묘원 공사

■ 해결 방안

- 왜곡된 정보 올바른 이해 실득 및 사업설명회 조기 개최
- 주민대표, 사업자, 충청남도, 논산시, 의회, 농민회,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좌담회 및 세미나 개최
- 선진지 견학 통해 주민수용성 확보 및 상생협력 방안 마련
- 현실적 피해 보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사업추진계획 내용, 보상, 사후보장)
- 유희부지 화장장, 생장 등 추가 사업 확장 없겠다는 약속
 - 법적 이행 담보로 오해불식(공중)
- 지역발전협의회 해체 후 전문가그룹 및 포럼 의뢰 공정하고 투명하게 문제 해결 시스템 구축
- 혐오시설(기피시설, 비선호시설)이 아닌 사회공익시설 인식 전환
- 사업 계획단계 시공 및 완공까지 주민감시제도 약속

7

1. 무궁화 자연생태공원 묘원 공사

■ 비교 : 정책건의, 행정사항 등

- 충청남도, 논산시 화장장 매장시설 등 추가사업 불허 약속
- 각종 연구시설 및 복합·편의시설(PIMBY) 등에 대한 유치 지원
- 벌곡 낙후지역의 예산 우선배정으로 균형발전 및 현안사업 지원
- 인근 석산개발사업장,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사업 만료 후 연장 불허 및 자연환경 원상 복구책 마련 (상대적 보상 제공)
- 청정지역의 농특산물 이미지 훼손에 따른 농가소득 지원방안 (농외소득)
- 남부권포럼 등 전문가와 연계한 행정시스템 구축 및 문제해결 방안 강구
-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이후 대안 모색
-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 평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실시(금강환경청)

8

2. 금산 우라늄 광산개발사업

■ 개 요

- 토지이출당스 충청남도에 우라늄광산 개발 사업허가 신청을 하면서 지역주민이 사업 반대
- 충청남도의 사업신청 인가 불허에 대하여 사업자가 부당성을 제기 지경부 광업조정위원회 행정심판 청구
- 사업자측 행정심판 청구에 나서자 지역주민 국민권익위원회 소원 신청 등 맞대응으로 갈등 확산
- 최근 중부대 공식 반대 표명 및 상하류지역인 금산군의회, 대전광역시 서구, 동구, 중구, 대덕구의회 가세 최근 옥천군의회도 참여
- 12월8일 대전 지역의회 의장단 현장 방문 우라늄개발에 대한 성명 및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

9

2. 금산 우라늄 광산개발사업

■ 진행경과

- 09. 3.30 채광계획 인가신청
- 09. 5.21 주민 탄원서 접수
- 10. 1.20 지역주민(17명) 충청남도의회(박찬중의원) 방문 결사반대 의사전달 및 탄원서 제출
- 10. 2. 3/2. 9 금산군의회, 금산군청, 목소리, 수영3리주민 탄원서 제출
- 10. 2.19 이장단 충청남도방문 광산개발 반대서명 탄원서 제출
- 10. 3. 3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충청남도)
- 10. 5.31 사업자 행정심판청구(이의신청) - 지식경제부
- 10. 8.21 금산군 기관장 비상대책위원회구성 복수면 비상대책위 다락원 일원 우라늄광산 반대 서명운동
- 10. 9.28 군의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지경부 및 국회방문
- 10. 11. 7 금산군의회 대전지역 5개구 의회방문 광산개발 반대 협조
- 10. 11.28 충남도의회 의장단 광산개발 반대 결의 및 건의서 지경부 제출
- 11. 6월 중 광업조정위원회 우라늄관련 행정심판 예정 국민권익위원회 현지방문 주민청취

10

2. 금산 우리농 광산개발사업

■ 성격(특성) · 쟁점 · 이해관계자분석

- 갈등정도 : 갈등 증폭기(분출기)
- 갈등성격 : 지역주민, 사업자, 의회 등
- 이해당사자 주민은 물론 충남도의회, 대전광역시 서구, 동구, 중구, 대덕구, 충북 옥천군의회, 중부대학교 등 다자간으로 확대
- 강(江)연결 지역주민 건강권 위협 반발(금산-대전유동천-옥천군-대청댐)
- 인근에 사찰 건립 공사 과정 인체 유해한 우라늄 및 황 성분이 대거 검출공사를 중단 사례로 위험성에 대한 주민 인식(2008년 채굴된 물에서 유해성분 잔재 육안 확인)
- 개발예정지 임야 개인 소유자 최근 언론 인터뷰(유00씨)
광산개발 반대 공식 입장 표명(충청투데이 10년12월17일자 보도)
- 목소리 일부 주민 사업자 제시 안 조건부 찬성

11

2. 금산 우리농 광산개발사업

■ 갈등 해법찾기 기본방향 설정

- 광산 개발의 주체가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중앙정부가 나서야 함
- 중앙정부, 지자체, 의회 등이 참여하는 대승적 차원의 협의체 구성
- 외국의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우리농광산개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민·관·산·학·연의 참여 협의체 마련 [전례가 없는 사업임]
- 사무실 현지(금산) 이전, 지역 주민 의견수렴(신뢰확보)
정당한 보상체계 구축(사업자 : 보상찬성 주민1인당 300만원 지급)

12

2. 금산 우라늄 광산개발사업

■ 해결 방안

-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실득 및 유해물질 분석자료 투명 공개
금산 : 0.038mg (경제성 없음), 남아공, 러시아 : 0.3mg (경제성)
- 우라늄 위험도에 대한 전문가 참여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인식 재정립
- 안전성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 확보 위한 지속적 노력
- 선진 외국의 우라늄 개발 성공 사례 및 학습 기회 등을 통해 사전에 정보 왜곡되지 않도록 조치 (원자력전문가 초청)
- 개발계획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하고 지역 농·특산물 이미지 추락에 대한 보상책 마련

13

2. 금산 우라늄 광산개발사업

■ 비교 : 정책건의, 행정사항 등

-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 차원 사업의 진정성에 대한 지속적 홍보
- 선진 외국의 사례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한 매뉴얼 확보
- 문제해결을 위한 성의 있는 자세와 다자가 참여할 수 있는 대화장구 마련

14

3. 헤리티지 마운트 컨트리클럽(前, 논산 나이스골프장)

■ 개 요

- 골프장건설 허가과정에서 임목축적조사서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조사되었는데도 당국으로부터 부당하게 사업허가를 받았다고 주장, 지역주민이 재조사를 요구하면서 갈등 발생
- 임목축적조사서에 대한 행정당국의 불신으로 지역주민과 전농연 논산지부가 가세하였으며 최초 사업자의 부도로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추진에 대한 신뢰마저 의심 받음
-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지속하자 지역주민 대전지방법원에 도시계획시설 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3차례 심리를 마치고 2011년 1월 12일 최종 선고 예정

15

3. 헤리티지 마운트 컨트리클럽(前, 논산 나이스골프장)

■ 진행경과

- 08. 4.30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골프장) 변경결정 고시
- 09. 2.27 도시계획시설사업 (체육시설/골프장) 실시인가 고시
-09. 3월 논산 나이스골프장 부도 → ㈜더블유엠건설 매입
- 10. 2.19 정문 실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미납 및 산지복구비 미예치, 보증 이행금 미예치
- 10. 6. 4 도시계획시설 계획 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 10. 10.27 3차 변론 (대전지방법원)
- 11. 1.12 최종 선고 예정

16

3. 헤리티지 마운트 컨트리클럽(前, 논산 나이스골프장)

■ 성격(특성) · 쟁점 · 이해관계자 분석

- 갈등정도 : 해소기 또는 갈등 재발
- 갈등성격 : 지역 주민과 사업자간 갈등
- 임목축적조사서 부당성에 대한 법원의 최종결심 공판결정에 따라 새로운 갈등 국면이 전개될 수 있음
- 사업자 법원의 결정이 유리하게 나올 경우 공사 강행 입장
- 지역주민 골프장 건설부지 내 일부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 행동 불사 움직임
- 전농연 논산지부와 연대 항소 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 갈등이 노정될 가능성 다분함

17

3. 헤리티지 마운트 컨트리클럽(前, 논산 나이스골프장)

■ 갈등 해법찾기 기본방향 설정

- 상호 상생협력을 위한 대화의 장 마련
- 사업자 잔여 토지에 대한 현실적 보상 및 지역주민 위로
- 갈등과 대립의 관계를 종식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

■ 해결 방안

- 중남(남부권)포럼 등과 연계하여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
- 상호 합의에 의한 보상을 통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주민들이 요구해 왔던 지역발전기금, 현실적인 토지보상, 수질환경 문제 등의 성의 있는 이행

18

4. 상생 청소년 수련시설 조성사업

■ 개 요

- 종산도 유지재단에서 청소년수련원시설 건립, 추진 과정에서 환경을 크게 해칠 것을 우려한 주민과 사업자간 갈등
- 인근 유사한 수련원시설 들어선 후 지하수 고갈로 식수 및 농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 겪은 피해경험 상기하며 반대
- 인근 마을 주민들은 특용작물 재배하고 있어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사업 반대
- 생활 오·폐수 배출에 따른 오염원 증가와 주거환경이 훼손되는 한편 지역의 이미지 실추 이로 인한 지가하락 우려

19

4. 상생 청소년 수련시설 조성사업

■ 진행경과

- 10. 7.28 주민설명회시 주민사업 반대의견 제출(석종3리 마을회관)
- 10. 8.27 주민 탄원서 제출 - 청소년 수련원시설 조성 반대
- 10. 9. 2 민원(탄원서)에 대한 주민설명회(석종3리 마을회관)
- 10. 9. 3 민원발생에 따른 조치계획수립 제출(논산시→종산도 유지재단)
- 10. 9.10 주민 고충민원처리 결과 회신
(민원내용 도시관리계획 수립과정에서 반영 예정)
- 10.11.18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최종시설결정)
- 11. 2월 중 실시계획 인가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한 설치허가 예정
- 2015. 준공 예정

20

4. 상생 청소년 수련시설 조성사업

■ 성격(특성) · 쟁점 · 이해관계자 분석

- 갈등정도 : 해소기 (상생협력사례)-스스로 문제해결
- 갈등성격 : 지역주민과 사업자간 갈등
- 계룡산 주변지역 종교시설이 속속 들어서면서 주거 환경이 훼손되는 등 집단 종교시설화를 막기 위한 주민들이 반발
- 계속 대규모 유사시설이 들어설 경우 자원의 한계 등으로 예상되는 환경파괴의 문제를 비롯해 지하수 부족 등을 우려하면서 집단 민원을 제기함
- 지역주민은 특용작물 생산기반을 확충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설이 계속 들어설 경우 계속 농사를 짓기 어려워 질 것을 우려하는 등 생존권 보장 차원으로 반발
- 과거 인근지역에 특정 종교단체 유사시설이 들어선 후 정서적, 도덕적 문제 등이 야기된 경험, 앞으로 종교시설 집단화 될 경우 지가하락 등 사유재산권 침해마저 우려

21

4. 상생 청소년 수련시설 조성사업

■ 갈등 해법찾기 기본방향 설정

- 갈등의 문제 대부분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나 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근거 확보 및 이행 약속
- 상생 청소년수련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도시계획시설로 주민이 우려하는 특정 종교시설이 아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

■ 해결 방안

-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안 최종 수립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적극 반영하고 합의된 사항을 이행
- 지하수 부족 및 환경오염문제는 환경영향평가의 기준 이상으로 강화하여 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22

4. 상생 청소년 수련시설 조성사업

■ 비교 : 정책건의, 행정사항 등

- 집단 종교 시설화를 대비한 항구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며 지역주민과 상생 협력 방안 마련
- 상호간 1차적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철저히 약속이행, 갈등이 재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
- 지역주민과 사업자간 구체적인 합의내용에 대한 이행각서 논산시가 담보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 준공 후 시설개방으로 공동체 형성을 위한 개방 공간 활용

23

시 사 점

- 비전문가 중재 조정에 참여 실패, 불신 가중(전문가 인력)
- 지방자치단체 갈등전문가 양성 및 정책적 지원
- 지역포럼과 연계한 사전예방 및 조기해소를 위한 노력
- 지역포럼 또는 전문가와 연계시스템 구축
- 시군과 충남포럼과 유기적인 업무연계 및 지원
- 상생협력을 통한 민주적 방법에 의한 갈등해결 학습 역량 향상
 - 4건 중 2건 법적 해결 1건 법적 비화 가능성
- 갈등 조례제정으로 공공정책 갈등 지원 및 해결 능력 배양(갈등으로 행정지연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비선호시설 사업 착수시 사전 갈등영향분석 실시

24

[제2부]

상생협력 ·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정기총회

◆ 목 차 ◆

- 감사패 및 감사장 전달
- 안건1 : 2010년도 충남포럼 경과보고
- 안건2 : 2011년도 충남포럼 주요사업계획(안)
- 안건3 : 충남포럼 임원변경 및 조직개편(안)

감사패 및 감사장 전달

■ 감사패 및 감사장 전달

구 분	성 명	소 속 및 직 책	비 고
감사패	김종문	충청남도의회 의원	「충청남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대표발의 추진
"	이주영	충남포럼 상임공동대표 (학 계)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감사장	조성남	충남포럼 공동대표 (언론계)	중도일보 주필
"	김미리	충남포럼 공동대표 (여성계)	충남대학교 교수
"	정선용	충남포럼 공동대표 (산업계)	금강 ENG 대표
"	최진하	충남포럼 공동대표 (NGO계)	환경부 UNDP/DEF 금강습지사업관리단 기획조정관
"	최한규	북부권포럼 운영위원장	선문대 정부간관계연구소 연구위원
"	조규영	중부권포럼 운영위원장	happystart 대표
"	이윤환	남부권포럼 운영위원장	건양대학교 교수
"	신기원	서해안권포럼 운영위원장	신성대학 교수
"	이준건	충남포럼 갈등조정위원장	한국공공행정연구원 갈등조정연구소장
"	강준배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포럼담당 사무관	
"	양승록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포럼담당 주무관	

<안건1>

2010년도 충남포럼 경과보고

2010년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경과보고

Ⅰ 2010년도 추진경과

■ 2010년도 실효성 있는 금강 살리기 갈등예방 및 관리방향과 추진과제 관련 세미나 개최(2010. 2. 2)

- 충남포럼은 2월 2일 화요일 충남발전연구원 1층 회의실에서 실효성 있는 금강 살리기 갈등예방 및 관리방향과 추진과제 관련 세미나 개최함.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한강 살리기 사업 및 안양천 살리기 사업의 추진과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금강살리기 추진방안의 시사점을 발견, 탐색해 보고 학계, 전문가 및 공무원, 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잠복되거나 또는 현재화된 갈등의 문제에 대한 해법과 대안 등을 찾아보기 위하여 개최함
-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금강살리기 사업」의 바람직한 정책 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관간, 시군간, 주민간 갈등해결을 통한 협력방안, 「금강살리기」사업에 따른 지역의 환경적, 경제적, 문화적 접근으로 문제제기와 함께 적합한 해법을 제시하는 한편, 예상되는 갈등소지와 관련한 공론화된 논의과정을 통해 「금강살리기」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새로운 협력적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 「금강살리기 사업」추진과 관련한 갈등해소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기본방향이 명확해야 하며, 갈등해소를 위한 고려요인을 정확히 찾아내고, 갈등유형별 갈등해소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갈등해소 및 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함



■ 금강살리기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2010. 2. 9)

- 금강살리기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갈등전문가들이 직접 금강살리기 사업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공주와 부여, 논산, 서천 등 지역의 농민과 각급기관 관계자, 이해당사자 등을 만나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



- 현장답사 및 실무 간담회는 전문가들의 이론적 한계를 넘어서 지역의 주민을 직접 만나고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과 폭넓은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갈등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민·관·학·연·언의 역할과 과제를 도출하는 등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한 일환으로 본 포럼 임원 및 회원들에게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역량을 높이고자 함

■ 「금강살리기」 범도민협의회 제3차 간담회 개최(2010. 3. 3)

- 「4대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금강살리기 사업」과 관련 「금강살리기 범도민 협의회」를 개최하고 4대강사업 홍보물 방영, 「금강살리기 사업」의 진행상황 보고, 토론회와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금강살리기 사업」의 현재를 기점으로 과거와 미래를 연계, 구체화하고 범도민협의회를 중심으로 의견수렴, 합의형성 및 자문활동의 활성화하여 충남포럼을 통해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예방관리 및 현장지원체제 강화 필요하며 「4대강살리기 사업」 중 「금강살리기 사업」이 가장 모범적이며 협력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

■ 「사회통합 및 갈등예방·해결 제도화 추진 전문가 워크숍」(2010. 4. 16)

- 사회통합과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안 입법 추진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으며 이미 전국의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청북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은 갈등관리 조례제정 및 운영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이며, 충남의 갈등관리 조례 제정은 결코 빠른 것이 아니며, 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갈등관리 조례제정은 중요함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은 2010년도 충청남도 갈등관리 조례제정 추진 및 중앙정부 갈등관리 법률제정 추진을 위한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사회통합 및 갈등예방·해결을 위한 제도화 추진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 및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갈등관리 기본법 제정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금년내 충청남도 갈등관리 조례제정 및 16개 시군 대상으로 갈등관리 조례제정을 위한 사전 전문가, 관계관 워크숍을 개최함
- 각계 각 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제안 설명과 토론을 통해 갈등예방·해결을 통한 법률안 제도화 추진에 있어서 학문적, 실무적, 전문적인 좋은 고견과 유익한 토론 내용들이 제안되었고, 사회통합 및 갈등예방·해결을 위한 법률안 제정은 정책운영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할 근거가 되는 중요한 법률인 만큼 서둘러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이 강조되었음

■ 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과 남부권포럼 간 2010년도 협력과제 도출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2010. 4. 27)

- 2010년도 충남포럼과 남부권포럼간 「금강살리기 사업」 관련 갈등예방관리 시스템 구축, 갈등모니터링 운영방안, 갈등순회매니저시스템 구축, 민·관 협력 방안, 홍보 및 대외협력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



- 공공정책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효율적 예방과 체계적 해결을 통하여 사회적 비용을 제거하고 사회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과 「충남 남부권역 정책포럼」간의 2010년도 운영계획 및 2011년도 사업계획의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한 업무 협력 강화
- 「금강살리기 사업」 등의 추진에 있어서 충청남도 및 각 시·군(공주시)의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고,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중재·조정을 위한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의 갈등현장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역할 및 방향, 교육연수,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예방 등 충남포럼 주요 사업과 「충남 남부권역 정책포럼」의 주요 사업간의 연계 협력 방안 모색

■ 갈등관리 조례 제정 및 '갈등조정사' 제도 도입 관련 대외협력활동

-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갈등조정사' 등 신규 자격제도 도입방안 주제 발표
 - 2010. 4. 23-24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최병학 충남포럼운영위원장은 "행정학과 실용성"이란 학술대회 주제에 부응하여 전환기 행정학분야의 신규 자격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를 통해 대학생, 대학원생들의 취업난과 행정학과와의 미래에 대해 가칭 '갈등조정사', '재난관리사', '인적자원관리사' 등 자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블루오션 영역을 만들어 학생들의 취업을 보장하고 전문가 영역 확대를 제안
- 실효적 갈등 예방 및 해결방안의 제도화를 위한 한국행정학회 국정포럼 주제발표
 - 「실효적 갈등 예방 및 해결방안의 제도화를 위하여」란 주제로 열린 한국행정학회 제18회 국정포럼(2010. 5. 6)에서 충남발전연구원 최병학(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 운영위원장)은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안」을 발표함
 - 최병학 운영위원장은 국가 지자체등 공공기관과 국민 상호간 신뢰 구축을 통한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권위 갖춘 기관이 조정안을 제시하여 분쟁 방지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가칭) '갈등조정사' 전문가 제도 도입을 포함한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안 제정이 시급함을 강조
- 협력적 갈등관리 공유를 위한 민관합동 갈등관리 세미나 주제발표
 - 6월 23일(수)-24(목) 부산 해운대 팔레드 시즈 콘도에서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고, 국무총리실이 후원한 "협력적 갈등관리 공유를 위한 민관합동 갈등관리 세미나"가 개최되었음

- 본 포럼의 운영위원장인 최병학 박사가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현황(충남포럼)과 갈등관리 조례제정 추진사례"로 주제발표 및 토론에서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하며 공무원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갈등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갈등전문가(갈등조정사)의 교육과 양성이 필요함을 강조

○ '갈등조정사' 자격제도 도입 관련 2010년도 행정학 공동학술대회 참여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운영위원장은 2010년도 6월 25일~26일 건국대 충주캠퍼스에서 열린 2010년도 행정학 공동학술대회인 "융합학문으로서의 행정학" 행사에 참석하여, '갈등조정사' 자격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행정학 신규 자격증 제도의 도입방안: 추진경과 및 과제"라는 주제에 대한 발표를 하였음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실무협의회 개최(2010. 9. 6)

- 2010년 9월 6일 충남발전연구원 1층 회의실에서 공공정책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효율적 예방과 체계적 해결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제거하고 사회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의 하반기 운영계획 협의, 공공정책의 수립·추진 단계에서 발생하는 충청남도 및 시·군의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에 대한 중재·조정을 위한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조례안」 제정 논의



- 충청남도 및 각 시·군의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고,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중재·조정을 위한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의 갈등현장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역할 및 방향을 모색을 제시하고, 상생협력·갈등관리에 대한 충청남도 및 시·군과 사회적 관심은 증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과 방향의 필요성을 제시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은 사업을 확대하고 4대 권역별 포럼과의 연계 발전할 수 있는 방향과 사업을 동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시·군 갈등관리 담당 공무원들은 갈등관리 업무에 대한 소신을 갖고, 시·군의 갈등을 조기에 예방하고 해결하여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4대 권역별포럼을 활용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 충청남도는 갈등관리 조례 제정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조례가 실질적으로 운영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시·군 또한 조례의 제정과 포럼의 지속적인 활용과 관심을 통해 지역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노력을 통해 4대 권역별 포럼을 활성화 하고 시·군의 갈등을 예방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가 시급하며, 충청남도는 각 시·군에 지침, 권고 등을 공문을 통해 예산의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제시함

■ 충청남도 민·관·군 갈등관리 협력체제 구축 실무협의회(2010. 9. 16)

-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국방연구소 회의실에서 2010년도 민·관·군간 갈등예방관리시스템 구축,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홍보 및 민·관·군간 대외협력 방안 등 갈등관리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전문가 실무협의회 개최를 통해 충청남도의 갈등관리 거버넌스 형성



- 갈등관리의 개념구조와 함께 민·관·군 관계에서 민·관·군 협력으로의 전환논리를 통해 민·관·군간 협력 방안을 찾아보고, 최근 주요 갈등현안에 대한 진단·논의를 거쳐 앞으로 요구되는 민·관·군 간에 바람직한 갈등 예방 및 관리 방안을 모색, 제안을 위한 민·관·군 갈등관리 협력체제 구축 실무협의회를 개최함
- 국가는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에 대한 특수성과 군이 받아들이는 갈등의 인식이 다를 것을 인정하고,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사안으로써 공공재(public goods), 가치재(merit goods) 등에 대한 법적 적용의 특수성 등과 관련한 갈등관리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함을 강조
- 정부는 민·관·군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갈등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 갈등 교육·양성에 주력하고 갈등전문가를 충분히 활용하여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노력해야 하며, 민·관·군의 조정·협상을 통하여 갈등예방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민·관·군 협력의 차원에서 갈등해법을 미리 미리 찾아가는 공동학습 차원의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성이 필요함을 제시함

■ 「금강사업」 추진의 갈등해소방안 모색 전문가 워크숍 개최 (2010. 10. 27)

- 2010년 10월 27일 충남발전연구원 회의실에서 실효성 있는 「금강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갈등실태와 관련하여 향후 효율적인 갈등해소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갈등예방관리와 다양한 참여자간의 소통과 대화를 통해 갈등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워크숍 개최



- 4대강(금강) 사업을 둘러싸고 정부와 자치단체간 갈등이 고조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물관리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신설 및 금강사업의 갈등조정위원회가 구성, 운영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
- 정환영 공주대 지리학과 교수는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해소 제도화 방안'을 통해 금강권역 7개 시·군의 주민 협력기구와 금강살리기 갈등 조정위원회 구성, 운영과 민관 및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에 의한 금강 사업의 영향평가 실시, 금강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 금강사업 아카데미 운영과 워크숍 및 세미나, 금강사업 현장견학 프로그램 및 홍보관 운영을 방안으로 제시함
- 충청남도의 경우 금강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국간 정보교류가 전혀 없어 부서간 협의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충남의 물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충남도의 주된 물 관련 정책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함

■ 민·관·군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 세미나 개최(2010. 11. 16)

- 2010년도 민·관·군간의 갈등예방관리시스템 구축, 민·관·군 간의 화합·협력,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구축, 갈등관리의 성공과 실패 요인들을 민·관·군 관계관 및 이해 당사자들 대상으로 공동학습을 통한 상생협력을 도모하여 충청남도 종합적 갈등관리 거버넌스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

- 민·관·군 협력을 위한 갈등예방 관리방안 세미나에서 논의된 갈등예방 및 해결과 관련한 토론 및 발표내용이 각 기관에서 유용하고 적절하게 활용되길 기대하며, 충청도에서도 이러한 갈등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함께 노력하여야 함을 강조



- 갈등해결을 위해선 보안이라는 특수성도 있겠지만 군사시설 유치때 지금까지의 선지정 후타협(협상)에서 선타협(협상) 후지정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민이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미리 공개하고 군사시설 유치 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군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과 필요성을 장기적, 지속적으로 홍보 마케팅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함을 강조

■ 2010년도 상생협력·갈등관리 포럼 임원 및 담당공무원 교육연수 개최 (2010. 11. 18)

- 충청남도 및 각 시·군 갈등관리 담당자와 충남 포럼과 4대 권역별 포럼 임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교육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경주시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센터와 공동워크숍과 현장방문 교육연수로 실질적 갈등관리 역량 배양하고 대단위 국책사업 추진의 해소방향을 모색



- 경주 방폐장은 처음부터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방폐장 공기연장과 내부분건 유출 등으로 신뢰가 훼손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혼란의 요소를 제거하고 진솔한 상황 설명으로 문제해결의 전제조건으로 제시되며, 방폐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방폐장 안전성 평가 방법론을 공유하고, 주민들이 갖는 의혹을 공유하여 주민들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주민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추가적인 공기연장이나 사고발생시 안전성을 알리는 지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음

- 대단위 국제사업인 금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현황과 국내·외 사례 분석, 금강살리기 사업 관련 갈등실태를 분석하고 전문가, 지역주민 의견조사를 통해 지역 갈등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금강살리기 사업을 갈등 예방관리 방향, 갈등 현장지원 방향, 갈등관리 제도화 방향 등으로 나누고 갈등예방관리 방향을 소통구조 개선, 갈등인식 차이 해소, 시민사회 대표성 제고·공공성 강화, 사회 합의 형성을 추진을 통해 신뢰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을 제시

■ 제3회 전국 대학(원)생 대상 충청남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논문 발표대회 개최(10.12.14)

- 충남포럼에서는 전국 대학(원)생들에게 충남지역의 상생협력과 갈등관리에 대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문적 발전을 꾀하고,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등 문제 해결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제3회 전국 대학(원)생 대상 충청남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논문 발표대회”를 2009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함
- 이번 논문대회는 충남포럼과 충남발전연구원이 주최·주관하며, 행정안전부, 충청남도의 후원으로 사회통합, 갈등해소, 상생·협력·공존공영 등 충청남도과 관련된 각종 갈등사안에 대한 정책 문제로 이론과 현실을 연계·접목시킬 수 있는 내용의 논문이면 전국 대학원생 및 대학생 누구나 개인 또는 5명 이내의 팀별로 응모할 수 있었음
- 또한 응모논문은 12월 1일(수)부터 6일(월)까지 최종적으로 충남포럼 사무국에서 이메일을 통하여 접수함, 접수된 논문은 12월 9일(목)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1차 심사과정을 거쳐 총 8편을 선정·발표하였음
- 선별된 논문은 12월 14일(화), 오후 2시부터 공주시에 소재한 충청남도지방공무원 교육원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논문발표대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한 발표 후 2차 심사를 통하여 대학원생 부문과 대학생 부문을 나누어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상을 포함한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2팀의 총 8팀의 수상이 이루어 짐

제3회 전국 대학(원)생 대상 충청남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논문 발표대회

전국 대학(원)생들에게 충남지역의 상생협력과 갈등관리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문적 발전을 꾀하고,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등 문제 해결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제3회 전국 대학(원)생 대상 충청남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논문 발표대회를 개최합니다.

◆ 논문공모대상

- 공모분야 : 사회경제, 문화예술, 자연 환경, 과학기술 등 충청남도과 관련된 모든 주제(지역에 관한 분야 제외)로 이론과 현실을 연계·접목시킬 수 있는 내용
- 공모대상 : 전국 대학(원)생
- 공모기간 : 2009년 12월 1일부터 6일까지
- 접수처 : 충남포럼 사무국 (충청남도 공주시 금강로 15길 10-1 충남포럼 2층 사무실)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이메일 주소: chongcheongnamdo@naver.com)
- 심사 : 1차 심사(12월 9일) - 2차 심사(12월 14일)
- 발표 : 12월 14일 오후 2시부터 공주시 금강로 15길 10-1 충남포럼 2층 사무실에서 발표
- 시상 :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2팀

◆ 발표대회 및 시상식 일시와 장소

- 일시 : 2009년 12월 14일(화) 오후 2시
- 장소 : 충청남도지방공무원 교육원 대강당 (충청남도 공주시 금강로 15길 10-1)
- 주최 : 행정안전부, 충청남도
- 주관 : 충남포럼, 충남발전연구원
- 후원 :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지방공무원 교육원

◆ 시상내역

- 최우수상 1팀 : 100만원 (충청남도지사상 포함)
- 우수상 1팀 : 50만원 (충청남도지사상 포함)
- 장려상 2팀 : 20만원 (충청남도지사상 포함)
- 최우수상 1팀 : 100만원 (충청남도지사상 포함)
- 우수상 1팀 : 50만원 (충청남도지사상 포함)
- 장려상 2팀 : 20만원 (충청남도지사상 포함)

- 대학원생 부문은 행정안전부장관상: 백석대(정철주 외 4명) 「지역대학과 지역발전에 연계성에 관한 연구 - 천안시를 중심으로」, 충남발전연구원장상: 단국대(김경란, 이나래)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 -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상생협력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상임공동대표상: 배재대(김태정) 「충청남도 민·관협력 파트너십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 공주대(김성록) 「해외사례분석을 통한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가 수상하였음



- 대학생 부문은 행정안전부장관상: 단국대(박정수 외 4명)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제안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 천안시를 중심으로」, 충남발전연구원장상: 성결대(김병석 외 2명) 「민·군 갈등 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 -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읍 전투비행장 소음사례를 중심으로」, 상생협력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상임공동대표상: 배재대(이왕찬 외 2명) 「공공 갈등관리의 유형과 지향점에 관한 연구 - 국내 공공부분 갈등 유형분석을 중심으로」, 충남대(정재영 외 4명) 「창조도시를 위한 문화거리 활성화 방안 - 유성구 공동의 민·관·학 협력을 중심으로」가 수상하였음
- 이번 논문대회를 준비한 최병학 박사(충남포럼 운영위원장)는 이번 논문 대회를 통해 전국의 대학(원)생들이 사회통합과 상생협력에 관심을 갖고 갈등해소를 위한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포부를 밝혔으며, 국내 공공부분 갈등을 중심으로 갈등유형과 지향점에 관한 대학(원)생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으며,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분쟁 같은 지자체간 주요 행정구역 분쟁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 충청남도의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 뿐만 아니라, 주요 도정수행에 있어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충남포럼의 관계자는 그 의미를 높게 평가했음

<안건2>

2011년도 충남포럼 주요사업계획(안)

2011년 상생협력 ·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주요사업계획(안)

Ⅰ 2011년 목표

- 갈등현안의 현장관리를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주민소통 · 갈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 연수 추진
 - 정기적인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개최를 통한 대안적 분쟁해결 모색, 갈등업무 담당자 및 임원·회원, 이해당사자 등 교육연수 지속적 실시, 우수 갈등해결 사례의 현장을 방문 · 벤치마킹으로 갈등관리에 대한 관심 제고, 소통 구조의 확립을 통한 道, 시·군 공공갈등 해소 및 협력체제 모색, 민 · 관 · 군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소통 · 합의형성 · 역할분담 도모
- 「갈등 유형별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및 매뉴얼 개발」을 통한연구 · 조사의 지속적 추진의 협력거버넌스 체계 형성
 - 충남도민의 갈등유형별 관리시스템 구축, 갈등관리 예방 매뉴얼 개발 등의 기획 연구과제 수행, 정기간행물 발간(정책포커스)기획과제 추진, 전국 대학(원)생 우수 논문 발표대회를 통해 대학(원)생의 참신한 아이디어 · 제안을 정책에 반영, 지속적 이고도 원활한 홈페이지 자료 업데이트 및 서버 관리, 상생협력 · 갈등관리의 저변 확산 추진
- 「역동적 · 실천적 · 혁신적 포럼」을 위한 운영시스템 정비 및 제도화
 - 갈등중재, 협의조정 현장기능 확보 및 현장 투입, 4대 권역별 포럼을 지원, 상생협력 · 갈등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다자간 공동 워크숍 개최를 통한 참여유도, 갈등사안 발생시 컨설팅 · 코칭 제공, 지식 ·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포럼운영기반 체계화 및 실천적 예방 · 지원 · 조정기능 확립

[2011년도 포럼 운영기조]

- ▶ 갈등예방 관리 및 갈등현장 실천적 지원 강화
- ▶ 교육·연구조사 및 실천적 학습역량 증진
- ▶ 도·시·군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 제도적 기반 확충
- ▶ 충남포럼~4대 권역별 포럼간 협력시스템 구축

⇒ 「전국 제1의 상생협력·갈등관리 道」 구현을 위한 협력·지원체계 구축

② 기본방향

○ 상생협력 및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민·군·관의 협력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합리적 갈등 해결 모색

- 다자간 소통구조 및 합의형성 조성 추진 현장 지원 기능 강화
- 4대 권역별 지원을 통한 파트너십 및 네트워킹 활성화 통해 갈등현안의 관심 제고와 중재 및 조정 등 실천적 기능 강화

⇒ 포럼운영 활성화로 「실효성 있는 갈등해결의 현장지원체계 구축」

③ 2011년 연구사업 추진계획(안)

○ 현장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갈등관리 담당자 교육·벤치마킹으로 현장지원·학습효과 향상

- 갈등현안 예방 해결을 위한 세미나 및 심포지엄, 워크숍 개최
- 갈등관리 담당자, 이해당사자 교육연수의 기회 증대
- 국내·외 유사 갈등사례 벤치마킹 현장방문 추진 및 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MOU, 상생발전현장 방안 모색 추진
- 전국, 충청남도, 각 시·군 갈등관리 전문가집단과 연계, 정책간담회의 지속적 추진으로 타협의 장 마련
- 도내·외 지역의 갈등 전문가의 갈등관리의 지식 공유 및 지원을 증대하여 효과적인 갈등관리 체계화

○ 연구조사 및 정기간행물 발간

- 충남도민의 갈등유형별 관리시스템 구축, 갈등관리 예방 매뉴얼 개발의 연구조사를 통한 기획과제 발간으로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의 기초자료로 활용
- 정기정책간행물 「정책포커스 : 상생협력·갈등관리 - 동향과 대안」 지속 발간 및 배포
- 포럼 홍보 강화 및 회원 확보를 위한 포럼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논문 발표대회 개최

- 2010년에 이어 제4회 전국 대학(원)생 충청남도 상생협력 갈등관리 우수논문 발표대회 개최 및 대회격상(대상 국무총리상) 추진
- 전국 대학(원)생의 갈등의 관심 제고와 참신한 아이디어·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고 논문발표대회가 대학생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도록 많은 홍보와 참여를 전면 확대
- 포럼활동의 홍보 강화 및 포럼 저변 확대를 위한 대학(원)과의 연계를 통한 관·학 협력 파트너십 구축

○ 갈등현안의 유형별 분석을 통한 해법을 모색하고 갈등현장의 실천적 지원·조정 역할을 위한 지원 강화

- 각 위원회별 현장기능 확보 및 필요시 현장투입 추진
- 갈등 예방을 위한 현장관리 및 실무자워크숍 개최
- 지역주민 및 이해당사자간 소통·합의형성·역할분담 도모
- 국내·외 전문가 초청, 갈등중재 및 협의조정 축적관리
- 갈등현안을 조사·연구하고 현장 지원의 중재·조정기능 강화

○ 사이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2009년도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이어, 충남포럼~4대 권역별 포럼 간 실시간 지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특히 관련 DB구축 및 홈페이지 수요자 중심 서비스 품질 향상
- 갈등의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단체와 연계를 통해 갈등관리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파악하고 홈페이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
- 특히 4대 권역별 포럼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도비지원으로 지식·정보관리 지속화 및 관련 워크숍 개최로 도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일익

- 4대 권역별 포럼 운영·지원을 위한 각 시·군의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로 운영기반 마련 및 중심도시 설정·운영
 - 북부권포럼 : 천안시, 아산시, 예산시, 연기군
 - 중부권포럼 : 보령시, 서천군, 청양군, 부여군
 - 남부권포럼 :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 서해안권포럼 : 서산시, 태안군, 당진군, 홍성군
 - 충청남도 조례를 기반으로 각 시·군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진하고, 4대 권역별 포럼을 운영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 지원
 - 충청남도의 각 지역별 갈등현안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 할 수 있는 연계망과 각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
- 기획연구과제 수행 및 갈등 상황 대응 매뉴얼 연구개발
 - 충청도민의 갈등유형별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기획 연구과제 수행
 - 충청남도의 다양한 갈등에 유형화 및 주민들의 갈등 인식을 파악하고 갈등의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갈등관리 시스템 마련
 -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실무자와 제3의 중립적인 인사 모두가 쉽게 분석·이해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
- 실무 및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한 포럼사무국 운영 체계화
 - 갈등현안 해결을 위한 운영위원회 및 각종 실무협의회 개최 지원
 - 정책포커스 등 정기간행물 편집위원회 개최를 통한 연구 성과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
 - 역동적·실천적·혁신적 포럼을 위한 사무국 운영시스템 정비 및 제도화

<안건3>

충남포럼 임원변경 및 조직개편(안)

■ 상생협력 ·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제3기 임원변경 관련

① 상임공동대표 1인 및 공동대표 4인 선임

- 임기 : 1년(연임가능)
- 공동대표단 중 최선임자를 상임공동대표로 선임
- 나머지 공동대표를 언론계, 산업계, NGO계, 여성계로 구분

② 감사 선임

- 2인 중 1인 충청남도 회계감사 담당공무원(자치행정과장) : 유병운 과장
- 나머지 1인 회원 중 선임(사업감사)

③ 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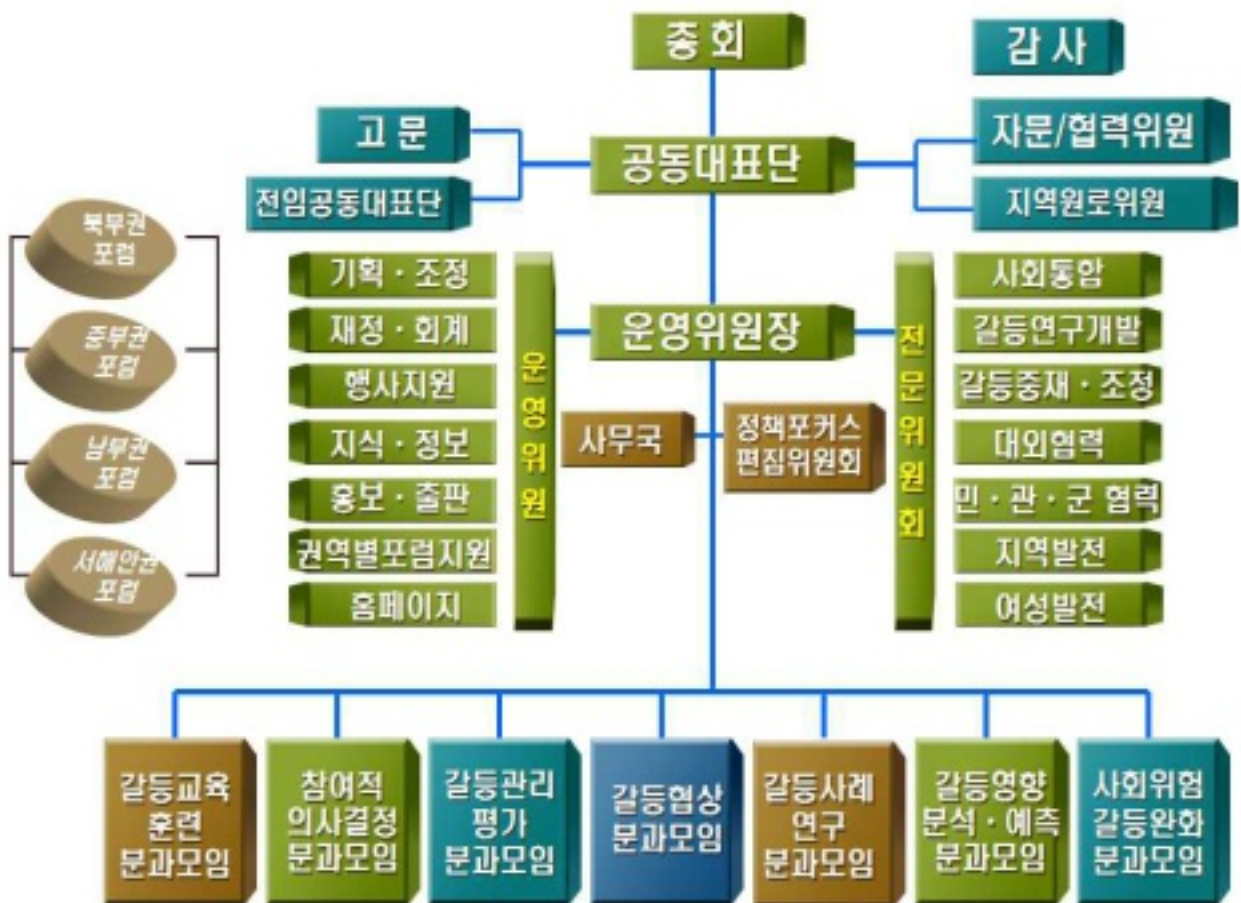
- 상임고문(당연직) 충남발전연구원장 교체 관련 : 박진도 원장

④ 운영위원장 → 상임운영위원장으로 변경

- 운영위원장 역할수행 ‘상임직’ 관련 명칭 변경 : 최병학 상임운영위원장
- 추후 4대 권역별포럼 상임운영위원장 역할 기대

■ 상생협력 ·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제3기 조직변경 및 정관부분개정 관련

1 현행



② 변경(안)



- 자문위원 및 협력위원 → 자문위원으로 변경
- 운영위원(7) → 운영위원(4)으로 변경
- 전문위원회(7) → 전문위원회(4)로 변경
- 분과모임(7) → 분과위원회(5)로 변경

※ 관련 정관사항 부분개정

→ 제5장(운영위원회) 제18조(구성), 제6장(분과위원회) 제21조(분과위원회)

부 록

- 충청남도 갈등·분쟁 관리목록
-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운영주관기관 지정서

[부 록 1] 충청남도 갈등·분쟁 관리목록

갈등·분쟁 관리목록(道)

(2010. 10. 5현재)

연번	갈등·분쟁명	당사자	유형	관련기관	비고 (해결방안)
1	KTX천안아산역 택시사업 구역('03)	천안시↔아산시,	도로교통	국토부 충남도	법 개정 (택시사업법)
2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관련('06)	시산시↔태안군	물관리	지경부 충남도 서부발전	정책결정 (주민합의)
3	해상경계 및 공유수면매립지 관할분쟁('09)	당진군↔평택시	행정구역	행안부 충남도 경기도	법적해결 (분쟁조정)
4	금강하구둑 기수역복원 관련('09)	서천군↔군산시	물관리	농림부 국토부 충남도 전북도	정책결정 (기관합의)
5	호남고속철 공주역사 설치관련('10)	철도공사↔주민간	도로교통	국토부 충남도 공주시	협의중재 (철도공사)
6	금산 우라늄광산 개발관련('10)	충남도↔광업권자	지역개발	금산군 지역주민	법적해결 (행정심판)
7	태안 광업권설정 출원관련('10)	지경부↔주민간	에너지	충남도 태안군	이해설득 (지역주민)
8	당진 동부화력발전소 건립관련('10)	지경부↔당진군	에너지	충남도 동부화력	기관협의 (지경부)
9	예산 신소재산업단지 조성관련('10)	예산군↔주민간	지역개발	충남도 당진군	이해설득 (지역주민)
10	당진 아산산업기지항만준설 관련('10)	해운항만청↔주민	지역개발	충남도 당진군	이해설득 (지역주민)
11	LH공사 택지개발사업 축소 관련('10)	LH공사↔주민간	지역개발	국토부 충남도 각시군	기관협의 (국토부)

갈등·분쟁 관리목록(市郡)

(2010. 10. 5 현재)

연도	갈등·분쟁명	당사자	유형	관련기관	비고 (해결방안)
1	논산 남골묘지시설 조성관련('08)	사업자↔주민간	비선호	(재)무궁화랜드 논산시	이해설득 (지역주민)
2	논산 연무골프장 인허가 관련('10)	사업자↔주민간	지역개발	(주)더블 류엠건설 논산시	인허가 재검토 (논산시)
3	천안 직산읍 국도1호선교차로 설치('10)	국토관리청↔주민	도로교통	천안시	기관협의 (국토관리청)
4	청양 신대저수지 축조관련('10)	농촌공사↔주민간	물관리	청양군	이해설득 (지역주민)
5	천안 풍세분기 송전선로 설치('10)	전력공사↔주민간	비선호	지경부 한국전력 충남도 천안시	이해설득 (지역주민)
6	서산 국방과학연구소 증설관련('10)	국방부↔주민간	지역개발	서산시	이해설득 (지역주민)
7	논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관련('10)	사업자↔주민간	지역개발	충남도 논산시	인허가 재검토 (논산시)

[부록 2] 충청남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 청 남 도 지 사 안 회 정

2010년 11월 10일

충청남도 조례 제3544호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역할·책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갈등”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주요시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는 도의 주요정책으로 도민 또는 그 밖에 기관·단체간의 갈등 예방이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 전반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요시책 등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일반도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제2장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갈등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요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도지사는 주요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및 공유) 도지사는 이해관계인이 주요시책 등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장 갈등의 예방

제8조(갈등영향분석) ① 도지사는 주요시책 등을 수립·시행 및 변경할 때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도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9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
4. 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도지사가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도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도 및 시·군과 주민간의 갈등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조정에 관한 사항
3.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시민단체 대표
3. 언론인
4. 도의회 및 시·군의회 소속의원
5.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계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당사자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심의결과의 반영)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원회의 제9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13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갈등 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일반주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요시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4장 갈등의 조정·해결

제14조(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주요시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도지사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는 위원회 위원과 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③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소속 인사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활동기간은 해당 조정안건이 해결될 때까지로 한다.

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5조(협의회의 의장 등) ①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 해야 한다.

③ 협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협의·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갈등의 당사자에게 제시한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해야 한다.

③ 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① 도지사는 갈등관리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하게 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주요시책 및 소관업무를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해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부된 갈등관리매뉴얼에 각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보완할 수 있다.

제18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 등) ① 도지사는 주요시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관리실태 등을 점검·평가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위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갈등관리실태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9조(전문가포럼 육성·운영 지원) ① 도지사는 갈등의 교육, 연구, 조사, 의사소통 및 당사자간 합의형성의 촉진을 위한 다자간 협의기구인 전문가 포럼(이하 “포럼”

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연구원 또는 대학 등에 그 운영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가포럼 운영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포럼은 갈등관리, 상생협력,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연구조사활동과 갈등 예방관리 세미나 개최 등 학술활동, 현장 간담회 개최, 대학생 및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 개최, 정기간행물 발간·배포, 홈페이지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업무를 시행한다.

제20조(전문 인력의 양성 등) 도지사는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제2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포럼 운영 및 조사·연구와 갈등영향 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1 호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

운영 주관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 충남발전연구원

2. 지정분야

- 가. 충청도내 갈등·분쟁 현안에 대한 해소방안 강구 및 정책제안
- 나. 충청도내 갈등·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 다. 갈등의 예방·해결·조정을 위한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지원
- 라. 갈등예방을 위한 시·군 권역별 정책포럼 구성·운영 지원
- 마.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사무국 운영
- 바. 그 밖의 포럼취지 및 목적을 위하여 필요성을 인정하는 업무

3. 위 치 : 충남 공주시 금홍동 101번지

「충청남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조례」 제19조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상생협력 갈등관리 포럼 운영계획(행정안전부)」,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운영계획」에 의거 위 기관을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이 중서를 교부합니다.(재교부 : 최초 교부 2007. 5. 23)

2010. 12. 3.

충 청 남 도 지 사 안 희 정

